

국제사회로의 통합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협약, 경제적 통합, 정보화를 중심으로

박건우**

정현주***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 변수가 한 사회의 부패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부패는 한 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국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반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규범, 경제적 통합, 정보화라는 국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로의 통합의 정도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UN 부패방지협약과 전자정부의 수준이 한 나라의 부패인식을 개선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반부패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부패, 부패인식지수, UN 부패방지협약

-
- * 본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유익하고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제1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외국인직접투자, 국제관계, 국제개발협력, 지방정부 등이다 (miryang88@yonsei.ac.kr).
 - *** 교신저자, 미국 Pennsylvania 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치경제, 국제개발협력, 비교발전행정 등이다 (heonjoojung@yonsei.ac.kr).

I. 서론

부패는 불공정한 경쟁을 가져오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함으로써 높은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Morris & Klesner, 2010). 또한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손실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Mauro, 1995). 부패 문제는 비단 개발도상국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진국 역시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차원에서 부패로 인한 비용은 2011년 전체 GDP의 약 1% 정도인 1,200억 유로이며(동아일보, 2014), OECD는 국가 간 거래에 있어 15% 이상이 뇌물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1994-2004년 기간 동안 개도국의 부정부패 행위로 인해 초래된 비용이 360억 불에 달하였다(국가청렴위원회, 2006: 6). 한국 역시 OECD 평균 수준으로 부패 수준이 향상된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약 0.6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현대경제연구원, 2012). 따라서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부패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패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¹⁾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부패에 관한 인식의 전 세계 평균은 2004년 약 4.14 수준에서 2010년 3.97까지 악화되었다. 동기간 OECD 국가들의 경우, 부패인식지수가 7.12에서 7.02로 소폭 악화되었다. 비OECD 국가들의 경우 부패인식지수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05년 조사 대상인 159개 중 40위(CPI=5)에서 2013년 177개국 중 46위(CPI=5.5)로 하락하여 여전히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는 전통의 잔존, 권위주의 정치체제, 시민참여의 부재 등 다양한 국내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김태은 외,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적 요인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혹은 부패에 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그루지아(Georgia)의 경우, 2004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시민참여를 포함한 거버넌스(governance)는 크게

1) 국제투명성기구는 비정부기구로서, 국제 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보고되고 있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대표적이며, 이를 통해 부패 방지 관련 홍보 및 국가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았지만, 부패에 관한 인식은 세계 133위(CPI=2)에서 55위(CPI=4.9)로 빠르게 개선된 반면, 동 기간 아이슬란드(Iceland)의 경우, 유사한 거버넌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관한 인식은 세계 3위(CPI=9.5)에서 12위(CPI=7.8)로 악화되었다. 그렇다면, 왜 유사한 국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관한 인식은 변화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부패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국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국제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Sandholtz & Gray(2003)에 따르면, 한 국가가 국제사회로 통합된 정도는 그 국가의 부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많은 국가들은 부패가 국가 간 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패 방지를 통해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국가들은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신뢰성(credi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반부패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부패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국제 사회에 밀접히 통합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관련 국제협약 가입, 경제적 통합 수준, 정부의 정보화 수준이 종속변수인 부패인식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국제협약 변수로는 UN 부패방지협약 체결기간을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통합 정도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기간 및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으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정보화 수준의 경우, UN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이용하였다. 패널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UN 부패방지협약 체결기간과 전자정부 발전정도가 부패인식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WTO 가입과 외국인직접투자는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 2장에서는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패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부패의 국제적 현황과 추이와 더불어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과 가설을 구성하고, 제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방향을 논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부패란 한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개념이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특정 사회에서는 부패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다른 사회에서는 용인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패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관한 다양한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공적 이익(public interest) 혹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이종수·윤영진 외, 2009: 202). Nye(1989: 966)에 따르면, 부패란 "개인, 가족, 파벌 등을 위한 금전적 혹은 신분상 이익 때문에 공적 역할에서 주어진 공식적 의무로부터 이탈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국제투명성기구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부패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로 정의하고 있다(김의환, 2004: 78에서 재인용).

이러한 부패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와 통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패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Goudie et al.(1998: 148)에 따르면, 부패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패 이론과 관련한 사례연구이다. 두 번째는 부패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사례연구이며, 세 번째는 부패와 경제적 성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가설 설정을 통한 실증 분석이다. 특히 부패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1990년 중반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홍주, 2013).

본 연구에서는 부패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을 부패의 효과에 대한 연구, 부패의 국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패의 국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패의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Goudie et al., 1998; Shleifer & Vishny, 1993; Rodrik et al., 2004). 일반적으로 부패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부(-)의 효과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차문중 외, 2009; Wei, 2000; 강동관, 2010). 또한 부패는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 수준을 낮추고(이상환, 2006), 부패가 만연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정부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장용진, 2013; Chang & Chu, 2006; 서인석 외, 2009).

반면 특정 조건 하에서 부패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부패는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으며, 때론 개발도상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부패는 "일정한 조건

에서 급행료(speed money) 혹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돈(grease money)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Goudie et al., 1998: 138).

둘째,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내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Lambsdorff(2006)에 따르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크기, 정부 구조, 민주주의, 문화 등이 포함된다(김태은 외, 2008). 또한 법과 제도적 수준, 소득 불균형, 자연자원 등의 요인들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과 가족주의(familism) 등 사회문화적 변수를 강조한 연구(Lipset & Lenz, 2000), 시민사회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약화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 정치적 변수와 부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Thomas et al., 2000),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를 통한 부패 통제가 가능하다는 연구(Bohara et al., 2004),²⁾ 분권화(decentralization)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Lambsdorff, 2006), 내부고발보호제도의 법제화와 부패인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나영·최진욱, 2008)³⁾ 등이 부패의 국내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에 포함된다.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정보화 또는 전자정부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최진욱(2014)은 전자정부의 하위 구성 요소인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참여 등이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태은 외(2008)의 연구와 권경희·김중현(2012)의 연구도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기술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패를 비교 가능한 국제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국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의 정도와 부패를 고려한 연구(Kaufmann et al, 1999; Wei, 2000), 무역개방성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Gerring & Thacker, 2005), OECD의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⁴⁾을 다룬 연구(Metcalf, 2000; Bhargava & Bolongaita, 2001), 국제적 규범과 국제기구로의 역할(Sandholtz & Gray, 2003)

2) 이상환(2006)의 연구에서는 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와 민주주의에 대해 분석하며 남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민주주의 수준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가 큰 요인이라고 보았다.

3) 김나영·최진욱(2008)은 내부고발보호제도의 채택여부에 따라 내부고발제도가 도입되어 충분히 성숙해진다면 부패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선진국의 경우가 부패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았다.

4) 본 협약은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를 처벌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 기업의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국가청렴위원회, 2006).

등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Sandholtz & Gray(2003)의 연구는 150개 국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국제적 통합의 정도가 부패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즉, 국제경제로의 통합이라는 경제적 유인과 반부패라는 국제적 규범의 확산 때문에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통합될수록 부패 혹은 부패인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부패의 원인과 결과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Sandholtz & Gray(2003)가 지적하듯 부패의 국내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 비해 국제적 요인들과 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으며, 실증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둘째, 부패 및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의 경우, 특정 시점 또는 소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국제적 변수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2003년 UN의 부패방지협약 등 상대적으로 최근에 형성된 반부패 국제협력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미비하다. 셋째, 정보화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국제적 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전자정부의 높은 수준 등은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국내행위자뿐만 아니라 국제적 행위자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신뢰도 높은 언약(credible commitment)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화와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요인 역시 국제적 요인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64개 국가를 대상으로 최근의 국제협약과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수준 등 다양한 국제적 요인들이 부패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부패 현상의 추이를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국제적 변수들과 부패인식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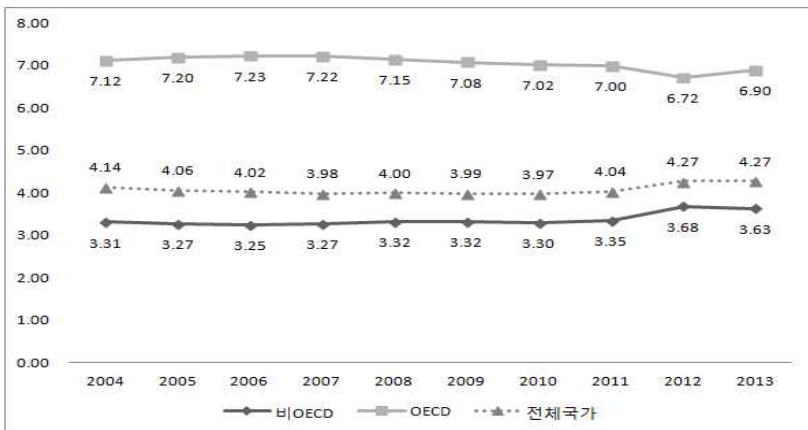
Ⅲ. 부패의 국제적 현황과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

1. 부패의 세계적, 지역적 현황과 추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패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부패 관행에 대한 처벌 강화, 부패에 대한 교육과 윤리의식 제

고, 경쟁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시민사회의 참여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부패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CPI의 전세계 평균은 4.14에서 4.27로 미미하게 향상되었을 뿐이다(〈그림 1〉 참조). 동기간 비OECD국가들은 3.31에서 3.63으로 부패인식이 향상된 반면, OECD국가들은 7.12에서 6.90으로 오히려 부패인식이 악화되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남부 유럽국가에서 부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OECD국가들과 비OECD국가들 간의 부패인식의 차이는 약 2배에 달하였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에서의 반부패 노력들이 한계적임을 보여준다.

〈그림 1〉 OECD회원국 및 비OECD회원국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 현황



주: 2010년 가입한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의 경우 2004년부터 OECD회원국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부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부패인식의 변화와 국가 간 편차 (variation)를 통해 부패의 국제적 현황과 추이를 검토하였다. 〈그림 2〉는 부패인식에 관한 비OECD국가들 사이의 편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국가들끼리의 부패인식에 관한 편차 역시 크며, 2010년까지 그 편차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OECD국가들 중에서 몇몇 국가들은 비OECD국가들의 평균적 부패인식지수보다 낮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

은 부패인식에 대한 설명은 경제발전의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변수들 역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2〉 OECD 국가 여부에 따른 부패인식지수의 차이(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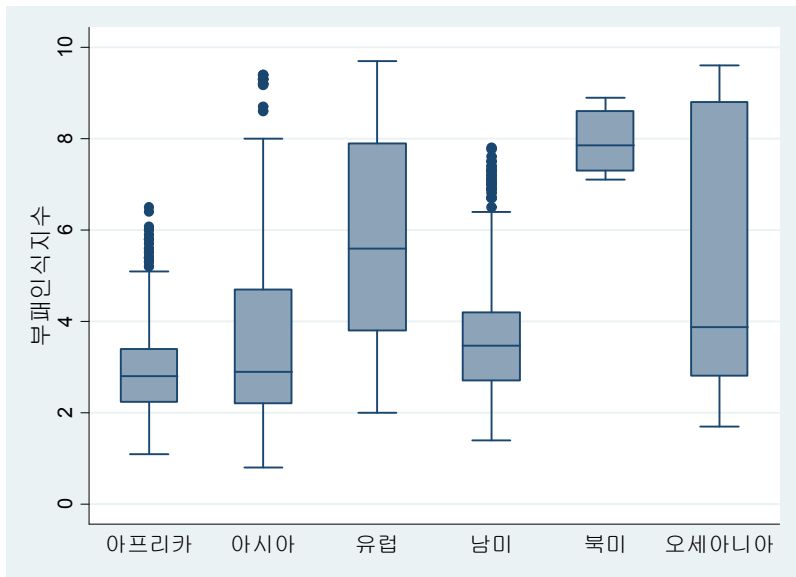
〈표 1〉와 〈그림 3〉은 부패인식에 대한 지역적 편차 역시 존재함을 보여준다. 2004년과 2013년의 부패인식지수를 비교한 〈표 1〉에 따르면, 북미지역과 오세아니아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패인식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평균 부패인식지수가 0.6 감소하여 기간 대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2004년과 2013년의 전반적인 부패인식 지수의 평균은 약 0.12 정도 낮아져, 부패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1〉 지역별 부패인식 정도의 변화

지역 구분	2004년 CPI	국가 수	2013년 CPI	국가 수
아프리카	3.272	51	2.925	36
아시아	3.684	44	3.567	37
유럽	5.825	40	5.707	39
라틴아메리카	4.232	28	3.632	25
북아메리카	7.7	2	8	2
오세아니아	5.709	4	7	3

주: 2004년과 2013년 양 기간에 대해서 각 국가의 평균 부패 정도를 비교한 것이며, 지수가 높을수록 부패의 정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지역 간 부패인식지수의 현황



주: 2004-2013년 기간 동안 각 지역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그림 3〉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 부패인식지수의 평균과 편차를 나타낸다.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국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아프리카지역, 라틴아메리카지역의 평균적 부패인식지수가 유럽지역, 북미지역, 오세아니아지역의 평균에 비해서 낮음을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점은 지역 간 편차 못지않게 역내 편차 역

시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역내 국가들이 역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문화적, 역사적 공통점을 지닌다고 가정하였을 때, 역내 부패인식지수의 높은 편차는 이러한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 역시 보여준다.

2. 국제사회의 반부패노력과 국제적 요인

국제적 차원에서 부패 방지에 관한 논의는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제정 이후 미국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국가 간 협력과 참여가 추진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특히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적 상호작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패의 영향 역시 한 사회와 국가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 WTO, OECD, UN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부패 감소와 척결을 위한 반부패 라운드를 구성함으로써, 활발한 논의를 추진해 왔으며, 많은 국가들 역시 이러한 국제적 규범을 인식하고 참여하고 있다(황진영·양현석, 2010), 이러한 국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합의로써 1998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 2003년 UN의 부패방지협약⁵⁾ 등이 제기되었다.⁶⁾

이러한 국제적 반부패 노력들은 국제적 규범의 확산, 경제적 통합, 정보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부패 방지와 관련한 국제적 협약과 제도는 반부패 가치들과 규범들을 국내로 확산시키는 통로로 작동한다(Sandholtz & Gray, 2003). 즉, 반부패 국제 협약 및 제도의 형성과 실행에 참여하는 국가엘리트들은 이러한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반부패 규범을 내재화하고, 이를 국내로 확산시켜

5) UN은 2001년 회원국 및 전문가들과 함께 부패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부패의 방지와 처벌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2003년 12월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하며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자했다. UN의 부패방지협약은 총 8장 7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부패방지를 통해 삶의 질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부패방지협약은 기존의 협약과는 다르게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국제적 거래(international transaction)나 무역에 기초한 협약이 아닌 국가 내부의 부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포괄적 의미의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확대하여 민간부문에도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며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노력을 주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6) 이외에도 1996년 WTO의 정부조달협정, 2004년 APEC의 반부패행동계획 채택 등이 존재한다.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고 볼 수 있는 UN의 부패방지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반부패 규범이 국내로 확산되는 중요한 메커니즘(mechanism)이라고 볼 수 있다.

UN의 부패방지협약 이외에도 OECD의 반부패 노력 등 국제적 반부패 협약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의 반부패라운드를 통해 논의된 국제 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은 국가 내부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가 간 경제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였을 때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이행 점검 상황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무역협회, 2010). 이에 비하여 UN의 부패방지협약은 예방조치(제2장)와 범죄규정 및 법집행(제3장) 등 다양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부패 방지의 이행을 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UN의 부패방지협약은 반부패에 관련된 최초의 포괄적 국제 규범으로써 참여하는 국가의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패가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 노력은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부패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활동에는 국제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있다. 먼저, 국제무역의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인 WTO의 경우,⁷⁾ 국제무역 분야에서의 무역 장벽과 관련한 불합리한 행태, 부정 및 부패와 같은 폐해를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WTO, 2008). 즉, 부패는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공정성이라는 WTO의 규범을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는 WTO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로비에 의해 특정 단체나 주체의 이익을 옹호하여 부패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WTO의 규범을 저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부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가 만연한 국가일수록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다(Kaufmann et al., 1999, Sandholz & Gray, 2003).⁸⁾ 부패가 심한 국가는 불필요

7)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무역 규범을 조정하고 협상하는 기구로써, 국제거래상의 기본적인 법·제도 규범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들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규범의 형성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무역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로 하여금 국가들의 무역정책과 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물론 부패의 정도가 심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도 선호될 수 있다고 밝힌 연구 또한 존재하

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증대시키며, 효율적인 시장의 작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패는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심지어 높은 수준의 부패로 인해 투자와 이윤의 사적 소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 유치국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패가 낮은 국가에 투자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김성수, 2001). 부패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실패한 사례들은 부패와 투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⁹⁾ 반면 이미 투자를 실행한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는 자본탈출(capital flight) 위험을 통해 유치국으로 하여금 반부패노력을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부패인식 향상과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의 확산과 심화는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여 부패와 관련된 사건들이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부패와 관련된 이슈, 부패 방지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전자정부의 활성화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고,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가능케 하며, 정부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보화로 인한 높은 투명성은 국내행위자들뿐만 아니라 국제행위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경희·김중현, 2012; UNDP, 2006).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폐쇄적인 관료제 내부를 투명하게 개방하여 국민적 감시나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행정연구원, 2011).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전자정부의 도입과 제도화는 국가차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태은 외(2008)에 따르면, ICT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확산은 부패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국내외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해 주고, 관리자를 원활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정보공개영역 및 공론의 장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외 행위자들이 정부에 갖는 신뢰성을 높이려는 전자정부의 도입과 발달은 부패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국제적 규범의 도입, 경제적 통합, 정보화 등 국제사회로의 적극적인

였다. 이들 국가의 공무원을 매수하고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9) 폴란드의 경우, 1990년대에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에 있어 뇌물이 필수적이었다(해외진출정보포털, 2010). 또한, 인도의 경우 TI의 조사에 따르면 부정부패로 인해 FDI의 유치가 실패하고 있는데 54%가 넘는 인도인이 공무원에 대해서 뇌물 제공 등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2015).

편입은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는 UN 부패방지협약의 비준과 승인기간, WTO 가입 기간, 외국인직접투자액, 전자정부 발전지수가 부패인식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IV. 연구 모형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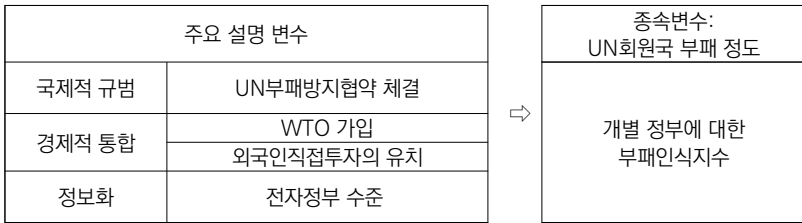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개별 국가의 국제사회로의 통합이 부패인식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와 192개의 국가의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활용한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이용하였다. 국제적 규모의 확산, 경제통합, 정보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살펴보았으며, 각각 UN부패방지협약의 체결 및 체결 후 기간, WTO 가입과 가입 후 기간 및 외국인직접투자액, 전자정부 발전수준으로 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수준으로 1인당GDP, 거버넌스 지수를 사용한 시민참여와 정치적 안정성, 문화적 요인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패널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은 통합최소자승모형(pooled ordinary least square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등의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 Hausman 검정 결과($p < 0.0000$)를 통해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¹⁰⁾ 고정효과모형은 샘플(sample)의 차이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설명변수의 경우 전년도 시점의 변수(lag variable)를 활용하여 자기 상관(auto-correlation)을 통제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10).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개별 국가의 부패 정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 모형은 아래 <그림4>와 같다.

10)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횡단면자료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과 시계열 자료의 자기상관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실증분석에서 활용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패널 개체를 고려한 횡단면효과(국가)와 시계열효과(연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 연구 모형



2. 변수

1) 종속변수: 부패인식지수

국가 단위에서 부패인식에 대한 조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수는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¹¹⁾와 뇌물 공여자 지수(Bribe Payers Index, BPI),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 중 하나인 부패 통제 수준(control of corruption), 그리고 Bertelsmann 연구소의 Transformation Index 등이 있다. 이 중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하나의 자료(source)를 근거로 한 데이터가 아닌 최소 3개 이상의 자료(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보고된 자료와 전문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산정하여 발표)를 근거로 종합하여 구축한 자료이므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개별 국가 단위의 부패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지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Sandholtz & Gray, 2003). CPI가 해당 국가의 부패 정도와 인식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데이터이며 매년 공식적으로 구축되어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부패 정도 측정하기 위해 CPI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CPI는 점수가 낮을수록 그 국가의 부패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부패인식지수가 86점이고 캐나다가 76점이라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CPI는 2012년부터 발표될 때부터 100점 척도로 전환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처럼 본 연구도 모든 연도의 지수를 10점

11)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개별 국가의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산정하는 점수이며 1995년 이후 매년 보고되고 있다. 부패라는 무형적 인식을 수량화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조사(survey)와 다양한 자료를 포괄하였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부패 비교의 연구에 있어 이 지수는 많이 활용되며 신뢰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척도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간 UN 가입국의 CPI를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1) 국제적 규범: UN의 부패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노력이다. 부패 방지를 위한 많은 국제규범들이 1990년 후반부터 형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규범이 형성된 것은 UN의 부패방지협약 제정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경우 OECD 회원국과 그 이외의 소수의 국가만이 참여했고, 다른 국제규범들 역시 특정 부문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UN 부패방지협약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172개국이 서명, 비준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부패방지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 협약의 구체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UN 부패방지협약의 구성

1장 (총칙)	·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2장 (예방조치)	· 반부패 정책 실천을 위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치 · 공직 선거 후보 및 정당제공 자 금의 투명성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및 공직자 재산 공개 · 정부조달 및 공공재정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사법부의 청렴성 강화 및 부패예방 ·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등의 참여 촉진 및 국민의식 제고
3장 (범죄규정 및 법집행)	· 공무원의 뇌물, 자산 횡령, 착복, 유용, 직권 남용을 범죄화 · 민간 부문 뇌물 및 횡령을 범죄화 · 범죄수익금의 세탁 및 은닉을 범죄화 · 관련 법 집행 방해를 범죄화
4장 (국제협력)	· 부패 예방, 조사, 기소 등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 범죄자 본국송환을 위해 증거 수집 및 인도 관련 사법공조 · 부정 수익금의 추적, 동결, 압류, 몰수를 지원하는 조치 이행
5장 (자산회복)	· 자산 환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 횡령 자금 및 부정 수익금 국가 반환
6장 (기술지원 정보교환)	· 부패방지 담당 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당사국간 자료 지원 및 교육 등 기술지원 제공
7장 (이행체제)	· 협약의 목표달성과 협약이행의 촉진, 평가를 위해 협약당사국 회의 설치
8장 (최종조항)	· 분쟁해결을 위한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자료: 한국무역협회(2010: 5)에서 재인용.

국제적 규범이 한 국가의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국가가 UN의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반부패 규범을 내재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UN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을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03년에 부패방지협약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2003년은 1, 2004년은 2, 2005년은 3과 같이 변수를 조작화하였다. 물론 협약 체결 전과 후를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국제규범의 사회화과정이 부패인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체결 여부보다는 체결 이후 누적 연수를 활용하였다.

가설 1: 정부의 부패방지협약의 체결 이후 기간이 길수록 부패인식에 대해 정(+)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2) 경제적 통합: WTO 가입과 외국인직접투자액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국내적 수준에서 부패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Sandholtz & Gray(2003)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WTO의 회원국으로 활동한 기간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부패감소를 통한 무역 활성화와 공정성 제고를 추구하는 WTO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기간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국내적 수준에서 부패를 감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WTO 출범 이후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누적 기간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은 WTO에 1995년 가입하였기 때문에 1995년은 1, 1996년은 2로 코딩하였다. 상대적으로 WTO로 가입한 기간이 오래된 국가일수록 부패통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정부가 WTO 회원국으로 활동한 기간이 증가할수록 부패인식 개선에 정(+)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역시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속적인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 또는 인수합병(merge and acquisition) 등을 통해 의결권(voting stock)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간접투자 혹은 포트폴리오 투자와 달리 기업의 경영 방침과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를 의미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국내 경제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이 커짐을 의미하며, 이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국내적 수준에서 부패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부패인식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약정액이 아닌 순수입액을 사용하였으며, 전년도 시점의 외국인투자액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국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World Bank Data에서 제공하는 각 국가의 연도별 FDI 총 규모를 활용하였다.¹²⁾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외국인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한 정부일수록 부패인식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3) 투명성: 전자정부 수준

전자정부의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UN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에서 2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UN 전자정부 준비 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지수는 온라인서비스 지수(online service index),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인적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의 3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전자정부 준비 지수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온라인서비스	·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반적인 능력 측정 · 국가대표포털사이트 또는 정부공식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특정 서비스의 존재·부존재에 따른 계량적인 평가 · 국가포털사이트, 보건, 교육, 사회복지, 노동, 재정 등과 관련된 각국 정부의 대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단계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공여부 조사
정보통신 인프라	· 전자정부의 선행조건인 기본 정보 통신관련 인프라 수준 측정 · 5개의 지표항목(인구 100명당 기준 인터넷이용자수, 전화 회선수, 이동전화가입건수, 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별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
인적자본	·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일반적 지적능력 측정을 통해 국민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반영 · 4개 지표항목(성인 문해율, 취학률, 학교교육 예상연수, 평균 학교교육 연수)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

출처: 통계청 및 UN 전자정부 발전 데이터베이스

12)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BX.KLT.DINV.CD.WD>)

기존의 연구들은 3가지 하위 요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개별 국가의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측정하지만,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정부의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과 정보공개와 관련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변수로 활용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제공은 비단 국내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행위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 4: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수준은 부패인식의 개선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3) 통제 변수

부패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 한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패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Treisman, 2000). 따라서 본 연구 역시 대부분의 연구가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1인당 GDP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또한, 국가의 공공부문 범위와 규모 또한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를 고려하여(Scott, 1972; Tanzi, 1998), 국가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 인구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내적 요인으로 알려진 정치적 안정성과 시민참여 및 기독교문화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¹³⁾ 이를 위해 WGI를 구성하는 6개의 거버넌스 지수 중 시민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와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을 사용한다. 기독교문화의 경우, 국민의 50%이상이 기독교인일 경우 1로,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설명과 출처는 아래 <표 4>와 같다.

13) Treisman(2000)에 따르면, 종교는 개인이 자신의 가족구성원들과 다른 시민들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자에 대한 도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르면, 특히 개신교회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종교에 반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관료의 월권행위나 부패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기독교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은 다른 종교적 전통을 지닌 국가들에 비해 부패가 낮다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독교문화권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표 4〉 변수의 설명 및 출처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출처
종속변수	CPI	부패인식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립변수	부패방지협약	비준 및 승인 이후 기간	UN Treaties
	WTO	가입 이후 기간	WTO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World Bank Data
	전자정부	국가별 온라인 서비스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통제변수	시민 참여와 책임성	국가의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World Governance Indicator
	정치적 안정성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	World Governance Indicator
	기독교 문화권	국민 50% 이상이 기독교일 경우=1 그렇지 않을 경우=0	CIA World Fact Book(2010)
	1인당 GDP	1인당 GDP	World Bank Data
	인구	국가의 인구	World Bank Data

V. 실증 분석

국제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구축한 패널 자료에는 총 192개 국가에 대한 자료가 있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실제 분석에서는 총 1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전년도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이다. 또한, Hausman test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p < 0.0000$). 그리하여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되, 이러한 차이가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에 따라 유효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표 5〉는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이다.

〈표 5〉 변수의 기술 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패인식지수	1657	4.07761	2.084011	.8	9.7
UN부패방지협약	1701	2.224744	2.516208	0	10
WTO	1910	8.498429	5.538261	0	17
외국인직접투자(백만불)	1829	7,768.34	27,325.05	-28000	340000
전자정부	1137	.2960954	.2451201	0	1
시민 참여와 책임성	1902	-.0541377	.9988527	-2.23	1.83
정치적 안정성	1879	-.0703246	.998785	-3.32	1.66
기독교 문화권	1910	.6513089	.4766808	0	1
log(1인당 GDP)	1838	12048.98	20234.85	108.015	193892

〈표 6〉은 변수들 간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유의도 99% 수준에서 확인한 것이다. 모든 독립변수들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는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0.7을 상회하는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부패인식 지수	UN부패 방지협약	WTO	전자 정부	log(FDI)	시민 참여	정치적 안정성	종교	log(1인당 GDP)
부패인식지수	1.0000								
UN부패방지협약	-0.0647	1.0000							
WTO	0.3030*	0.3976*	1.0000						
전자정부	0.6061*	0.0820	0.2698*	1.0000					
log(FDI)	0.1513*	0.0391	0.0614	0.3982*	1.0000				
시민참여	0.7534*	-0.0592	0.2510*	0.4611*	0.0885*	1.0000			
정치적 안정성	0.7113*	-0.0990*	0.1047*	0.2658*	0.0345	0.6653*	1.0000		
기독교 문화권	0.0050	-0.0012	0.0083	0.0024	-0.0038	-0.0076	0.0170	1.0000	
1인당GDP	0.7819*	0.0135	0.2073*	0.5595*	0.1604*	0.6176*	0.6277*	0.0360	1.0000

주: * p<0.001의 수준에서 유의함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UN 부패방지협약 가입기간과 개별 국가의 전자정부 발달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패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표 7) 참조). 하지만 WTO 가입기간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OECD국가의 경우, WTO 가입기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가설과 달리 부패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OECD 국가의 경우, UN 부패방지협약과 전자정부 발전수준이 부패인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7〉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1) 전체국가	(2) OECD 국가	(3) 비OECD 국가
UN부패방지협약	0.0331**(2.46)	0.00842(0.31)	0.0324**(2.14)
WTO	0.0150(1.10)	-0.0555**(-2.29)	0.0177(1.35)
log(외국인직접투자)	0.0768(1.19)	0.0374(0.53)	0.135(0.84)
전자정부	0.253*(1.87)	-0.362(-1.12)	0.474*** (2.86)
시민 참여와 책임성	0.271**(2.52)	-0.446(-0.92)	0.267** (2.50)
정치적 안정성	0.170*** (2.81)	0.633*** (2.86)	0.152** (2.50)
기독교 문화권	0.0368(1.16)	-0.0175(-0.24)	0.0619*(1.83)
log(1인당 GDP)	0.149(1.61)	0.855*** (2.78)	-0.144(-1.42)
상수항	0.873(0.54)	-1.744(-0.57)	0.961(0.26)
연도 더미 투입 여부	Yes	Yes	Yes
N	830	170	660
R ²	0.144	0.232	0.225
adj. R ²	-0.093	-0.064	0.002

주: * p< 0.1 ** p<0.05, ***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괄호 안은 t값을 의미, 연도의 기준은 2004년이며 개별 연도에 대한 통계 값은 생략하였음.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UN 부패방지협약 비준 이후 누적된 시간은 부패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처벌 규정을 지닌 이 협약이 국제 사회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반부패 규범의 국내적 확산을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협약의 비준과 체결을 통해 국제 사회로 통합이 진전될수록 부패가 감소된다는 Sandholtz & Gray(2003)의 연구 결과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WTO 가입기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OECD국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WTO 가입기한은 기대한 방향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패인식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개별 국가의 WTO의 가입은 국제 사회의 경제적 통합으로의 이행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는 무역과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한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부패 행위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Alai, 2008: 260). 하지만, 최근 OECD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WTO라는 국제무역거버넌스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s)을 포함한 다양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PTAs)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로서 WTO의 부패 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부패인식을 제고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물론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역으로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특혜를 추구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될 수도 있다. 즉, 일부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패하지만 큰 투자이익이 기대되는 국가에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로비나 뇌물과 같은 부패 행위를 통해 경쟁 기업들과의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투자이익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면, 투자유인이 충분히 클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도상국들보다는 부패수준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에 투자를 수행했다고 분석한 연구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O'Neill, 2014).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의 발달은 개별 국가와 정부에 대한 일반 시민들과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들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전자정부는 정부에 대한 감시의 증대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공론장을 활성화시켜 정부의 활동과 공공부문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김태은 외, 2008). 또한, 전자정부는 부패 근절과 같은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국가 정보화 거버넌스와 ICT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패 감소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전자정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OECD 국가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패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OECD국가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부패와 관련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자정부의 발달로 인해 부정 및 부패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OECD국가와 비OECD국가 간 주요 변수의 통계적 영향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OECD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부패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에는 부패인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비OECD 국가는 여전히 부패인식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크며, 다양한 국제적 변수들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정치적 안정성 등 국내적 변수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전체 국가, OECD국가와 비OECD국가에 대해 각각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OECD 국가에서는 모든 가설들이 기각되었으며, 비OECD국가에서는 UN 부패방지협약 누적기간과 전자정부 발전수준과 관련된 가설이 지지되었다. 전체국가로 보았을 때 역시 UN부패방지협약과 전자정부와 관련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8> 가설 검정 결과 요약

	예상 부호	전체 국가	OECD 국가	비OECD 국가
UN부패방지협약	+	지지(+)	기각	지지(+)
WTO	+	기각	기각	기각
외국인직접투자	+	기각	기각	기각
전자정부	+	지지(+)	기각(-)	지지(+)

VI. 결론

본 연구는 국제사회로의 통합이 한 국가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UN 부패방지협약 체결, WTO 가입, 외국인직접투자 및 전자정부 발전정도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UN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한 기간이 길수록, 전자정부의 온라인서비스가 발전할수록,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통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무역 및 투자관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부패를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UN 부패방지협약 비준이 중요하며, 이러한 국제적 규범을 국내 규범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UN 부패방지협약의 경우 구체적이지만, 강제성이 매우 약하고 협약의 이행에 대해 평가와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 내에서 실질적인 법률과 제도를 통한 반부패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부패 감소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부패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증대하고, 경제적 상호작용의 비용을 높이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제적 문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제적 경제행위자들 간 부패관련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형성하고, 부패관련 이슈를 조정하고 감시할 국제기구의 역량 강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의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¹⁴⁾나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의 규정은 경제 활동의 제재에 있어 실질적인 제도나 정책적 변화에 대한 구속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부패는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는 사회적 특성이므로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10년이라는 분석기간과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성, 소득 분배와 같은 경제발전의 질적 특성 등 국내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적 요인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국내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협약이나 국제기구 가입의 지속기간만을 고려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규범의 내재화 과정, 사회화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또는 비교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제경제행위자들이 대상국의 부패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역이나 투자 등 구체적 경제행위에 반영하는지를 개인적 수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국제적 요인과 부패 인식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동관. 2010. “부패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3(3): 1185-1203.

14) TPRM을 통해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무역관련 규정과 관행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WTO 무역규범에 반하는 제도들에 대하여 다자적 압력을 받게 되며, 개선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 다음 TPRM에서 재검토를 받음으로써 제도변화에 대한 압력이 존재한다. 결국 WTO 회원국으로 활동한 기간이 증가할수록 투명성 제고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 강성남. 2002. “반부패정책의 제도화과정 분석.” 《한국부패학회보》, 7(1): 1-34.
- 국가청렴위원회. 2005. 《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가이드》, 국가청렴위원회
- _____. 2006. 《OECD 뇌물방지협약 가이드 북》, 국가청렴위원회
- 권경희·김종현. 2012. “정보통신기술 유형에 따른 국가부패인식수준과 국민소득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4): 27-43.
- 김나영·최진욱. 2008.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상식. 2004. “부패방지기구의 조사제도와 부패 간 상호관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 홍콩,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9(4): 21-54.
- 김성수. 2001. “기업윤리의 국제동향과 부패관행에 관한 국제규범회의의 동향 분석.” 《한국윤리경영학회》, 3: 1-27.
- 김유경. 2007. “반부패 국제 레짐 형성에 대한 비판이론적 접근: 신자유주의적 반부패 규범의 제도화와 반부패 전략.” 《국제정치논총》, 47(3): 27-50.
- 김의환. 2004. “OECD 반부패 논의 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노력.” 《OECD Focus》, 3(1): 78-87.
- 김태은·안문석·최용환. 2008.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한국행정학보》, 42(1): 293-321.
- 김흥주. 2013. “국가 간 반부패 협력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UN 반부패협약 (UNCAC) 비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2(4): 197-230.
- 라영재. 2008. “반부패 전략과 정책의 부패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3(3): 37-60.
- 민병익·이상범. 2008. “반부패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2(3): 125-146.
- 민인식·최필선. 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 박용수. 2004. “국제 반부패 동향과 한국.” 《한국동북아논총》, 30: 275-294.
- 서인석·권기현·이동규. 2009. “국가부패유형과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 Peter Evans의 국가유형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4(4): 21-46.
- 윤동호. 2002.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상환. 2006. “부패와 민주주의: 남아시아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남아시아연

구», 11(2): 111-130.

이종수·윤영진. 2009. 《새 행정학》, 서울: 대영출판사.

장용진. 2013.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 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19(3): 189-214.

차문중·김병연·김대용·김민정·김민수·박은희. 2009.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최진욱. 2014. “전자정부와 부패: 국가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9(1): 1-23.

최호진. 2011. 《전자정부 부패 취약성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1-18.

한재진·이부형. 201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부패와 경제성장-부패만 해소되도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 《한국경제주평》 489: 1-14.

황진영·양현석. 2010. “국제경제기구 가입과 무역개방도: 정치경제학 접근.” 《국제지역연구》 19(2): 1-29.

Ala'I, Padideh. 2008. “The WTO and the Anti-Corruption Movement.” *Loyola University Chicago International Law Review*, 6(1): 259-278.

Bhargava, Vinay, & Emil Bolongaita, Jr. 2001. “Making National Anti-Corruption Policies and Programs More Effective: An Analytical Framework.” *World Bank and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20.

Bohara, Alok, Neil Mitchell, & Carl Mittendorf. 2004. “Compound Democracy and the Control of Corrup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Policy Studies Journal* 32(4): 481-499.

Chang, Eric, & Yun-han Chu. 2006. “Corruption and Trust: Exceptionalism in Asian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68(2): 259-271.

Gerring, John, & Strom Thacker. 2005. “Do Neo-Liberal Policies Deter Political Corrup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9(1): 233-254.

Goudie, Andrew, & David Stasavage. 1998.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orruption.” *Crime, Law & Social Change* 29(2): 113-159.

Jaeger, Paul. 2003. “The Endless Wire: E-government as Global Phenomenon.”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0(4): 323-331.

- Kaufmann, Daniel, Aart Kraay, & Pablo Zoido-Lobatón. 1999. "Governance Matter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196*.
- Lambsdorff, Johann. 2006. "Cause and Consequences of Corruption: What Do We Know from A Cross-section of Countries?" in S. Rose-Ackerman(ed.),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Corruption* (pp. 3-51). UK: Edward Elgar.
- Lipset, Seymour, & Gabriel Lenz. 2000. "Corruption, Culture, and Markets," in L. E. Harrison and S. P. Huntington (eds.).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pp. 112-125). New York, NY: Basic Books
- Mauro, Paulo. 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681-712.
- Metcalfe, David. 2000. "The OECD Agreement to Criminalize Bribery: A Negotiation Analytic Perspective" *International Negotiation* 5(1): 129-155.
- Morris, Stephen, & Joseph Klsener 2010. "Corruption and Trust: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vidence From Mexico."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3(10): 1258-1285.
- Nye, Joseph S. 1989. "Political Corruption: A Cost-Benefit Analysis." In Arnold J. Heidenheimer, Michael Johnston, Victor Levine (eds),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pp. 963-965).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Rodrik, Dani, Arvind Subramanian, & Francesco Trebbi. 2004. "Institutions Rule: the Primacy of Institutions over Geography and Integ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9(2): 131-165.
- Sandholtz, Wayne, & Mark Gray. 2003.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National Corrup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4): 761-800.
- Scott, James. 1972.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hleifer, Andrei & Vishny, Robert. 1993. "Corrup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3): 599-617.

- Tanzi, Vito. 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 Thomas, Vinod, Mansoor Dailami, Ashok Dhareshwar, Daniel Kaufmann, Nalim Kishor, Ramon Lopez, & Yang Wang. 2000. *The Quality of Growth*.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reisman, Daniel.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3): 399-457.
- UNDP. 2006. *Benchmarking E-government: A Global Perspective*. United Nations Divisions for Public Econom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 Wei, Shang-Jin. 2000.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1-11.

《동아일보》. 2014. "공공의 적 1호 부패와의 전쟁...세계는 청렴도 높이기 경쟁중 '쑥.'" 10월 29일.

《한국무역협회》. 2010. "UN부패방지협약 개요"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nQuU8eIlg8VMJ:www.kita.net/bin/service/download.jsp%3FnIndex%3D171936+&cd=1&hl=ko&ct=clnk&gl=kr>. 검색일 2015년 2월 18일.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2010. "폴란드, 부패의 나라?: 로비를 제한하는 법안 도입 추진, 선량한 기업가 피해 우려"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498&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01005111303670169. 검색일 2015년 1월 24일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2015. "인도 성장 속도, 중국을 뛰어넘다"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5&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5929&ARTICLE_SE=20301&MODE=L. 검색일 2015년 2월 17일

《OECD Statistics》. 2010. "폴란드, 부패의 나라?: 로비를 제한하는 법안 도입 추진, 선량한 기업가 피해 우려"

<https://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7207>. 검색일 2015년 12월 9일

《World Trade Organization》. 2008. "10 Benefits of the WTO TradingSystem."

http://www.wto.org/english/res_e/doload_e/10b_e.pdf. 검색일 2015년 1월 15일.